

트럼프 “역사상 가장 성공…중국과 공정하게 무역합의”

취임 100일 지지자들과 집회

낮은 지지를 질문엔 “가짜 조사”
미국 우선주의 기조 거듭 강조
“연준 의장보다 금리 잘 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머콰운티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집권 2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가 제조업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한 듯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의 세금과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 와서 공장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십년간 정치인들이 중국을 강화하기 위해 디트로이트(미국 자동차산업의 요람)를 파괴했지만, 여러분은 드디어 노동자를 위한 투사를 백악관에 가지게 됐다. 난 중국을 우선하는 대신에 미시간을 우선하겠다”며 ‘미국우선주의’를 거듭 내세웠다.

그는 인도,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전 세계

국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다면서 “우리는 협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가진 것은 우리이며 미국에 있는 것도 우리다. 그들은 우리 상품의 일부를 원한다. 우리는 그냥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난 공손하고 친절해지고 싶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려는 국가들과 협상하되 뜻대로 안 되면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일자리를 많이 훔쳐 갔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합의할 것이지만 공정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첫 임기 때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위해 수입 세타기에 관세를 부과한 일을 다시 소개했다. 이 관세는 삼성과 LG를 겨냥한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나라들은 군대와 무역 둘 다에서 우리를 정말 속여왔지만 내가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및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일을 잘 못하는 연준 인사가 있다”면서 “연준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가 자기 일을 하도록 뒤편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난 그보다 금리에 대해 훨씬 많이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머콰운티에서 취임 100일 기념 유세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화당원보다 민주당원을 훨씬 많이 인터뷰하는 “가짜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서 현재 40%대로 집계되는 자기 지지율에 대해 “난 우리가 60~70%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공산주의자인 극좌 판사들이 우리

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도록 둘 수 없다.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뺏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건 상황을 두고 한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

방대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설에서 자주 그레왔듯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거듭 비판하는 데 역점을 두기도 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수감자에 ‘요금 부과’ 제도입 검토

교도관 근무 개선 비용 마련

프랑스가 교도관의 근무 조건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 형태의 수감비를 제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랄드 다르마넝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저녁 TF1 방송에 출연해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르마넝 장관은 수감자들이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하루 수감될 때마다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까지 수감자는 수감비를 냈다. 병원 입원 시 부담하는 입원료처럼 교도소에도 수감 일수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다만 수감자가 자신의 구금 비용에 상징적

으로 기여하라는 취지였던 만큼 체계적으로 징수한 건 아니다.

이 제도는 이후 수감자가 종종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가 적고 이중 처벌을 부과하는 셈이라 불공정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2003년 폐지됐다.

다르마넝 장관은 연간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며 이 기여금 명목의 수감비를 제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빈곤층이나 미결수는 제외한다.

프랑스 하원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토프 내즐렌 의원은 수감비 제도가 납세자와 국가의 교정 시설 운영비를 줄일 뿐 아니라 수감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재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총선 집권 자유당 ‘역전승’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며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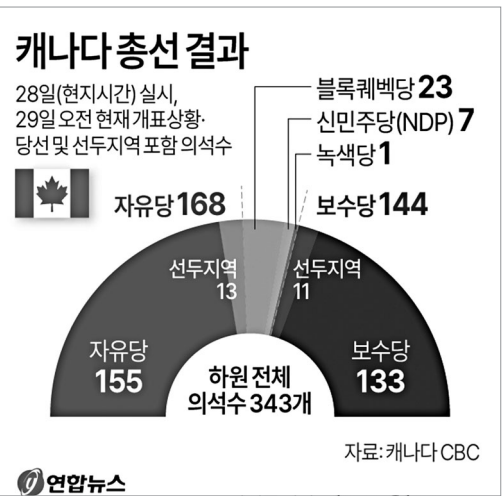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는 하지만 인기 추락으로 고전하던 자유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 속에 역전 드라마를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니 총리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배신을 잊지 않겠다며 무역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캐나다 공영 CBC 방송에 따르면 오타와 시간으로 29일 오전 4시 현재 자유당은 하원 전체 343개 의석 중 153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고, 15개 지역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은 133개 지역구에서 승리, 11개 지역구에서는 앞서고 있다.

승리 및 선두 지역을 합치면 자유당은 총 168석, 보수당은 총 144석이다.

두 정당에 이어 퀘벡지역에 기반을 둔 블록퀘벡당은 당선 및 선두 지역이 총 23곳, 진보 성향



의 신민주당(NDP)은 총 7곳, 녹색당은 1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AP 통신은 자유당이 보수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유당이 의석의 과반(172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블록퀘그 통신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안보리, 북 파병 인정 후 첫 우크라 회의…정당성 공방

황준국 대사 “안보리 결의 위반”
우크라 대표 “북러동맹은 범죄”
러 대사 “북한 형제들에 감사”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처음 열린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 측 대표는 북한 병사들이 옹호하게 싸워줬다고 감사를 표한 뒤 북한군 파병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북한군 파병을 놓고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을 부인해온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에서야 이를 공식 인정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을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약체결 실패 중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한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한 북러 조약 제4조를 근거로 들어 러시아 파병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지원과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한국 정부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의 일관된 입장이다.

황 대사는 “북한의 대포 시스템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지속해서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앗아왔다”며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러·북단 무기이전 및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대표도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전장에 배치됐음을 공개 과시했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러시아의 공격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이고 군사적 동반자 관계의 일부”라며 비판했다.

이해 당사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

이나의 마리야나 베자 외교 차관도 지난 24일 13명이 숨지고 어린이아이를 포함한 90여명이 부상한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으며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의 범죄적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비난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라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말해 북한 측 주장에 동조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 국민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옹맹함을 보여준 북한의 형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연합뉴스

훗카이드 도마리원전 재가동 사실상 합격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30일 훗카이드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지이신론(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도마리원전 3호기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 합격을 의미

하는 심사서안(案)을 승인했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일반인 대상 의견 공모 등을 거쳐 올여름 정식 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전 재가동에는 보안 규정 심사, 지역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 원전을 운영하는 훗카이드전력은 쓰나미

(지진해일) 대책 일환인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7년께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훗카이드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에서는 최신행 원전으로 꼽히지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훗카이드전력은 2013년 원전 재가동을 신청했으나, 원전 부지 내에 있는 단층의 성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연합뉴스